

2020. 07

2020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신풍동)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처 분 요 구 목 록

□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천 원,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8	3,324	1*	6	2	2	2	7	1	-	-	4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천 원)

연 번	건 명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계	18건		3,324	1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훈계		1	
2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주의			
3	지방자치단체구매(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회수)	110		
5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시정(소화)	415		
6	인지세(수입인지) 수입 소홀	시정(소화)	60		
7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주의			
8	계약집행기준 부적정	주의			
9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0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시정(추징)	495		
11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추징)	2,173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2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통보			
13	수입증지 수수료 납입 지연	통보			
14	쌀/밭소득등 보전직불금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71		
15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6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17	경로당 및 한울타리행복의 집 운영비 정산 소홀	통보			
18	가정위탁 보호아동 관리 소홀	통보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신분상조치	훈계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르면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타수용비(법용 S/W 구입비, 도서 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으로 사용하며,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 비정수 물품구입비 등이라 되어있으며,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별표2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에 따라 계약에 의한 공사비의 경우 계약체결시에 지출원인행위를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평동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예산과목, 예산집행 절차 등을 철저히 확인·검토 후에 지출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신평동은

- ①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민간인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면서 참석자 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식비는 행사운영비가 적정함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였음. 또한 결과 보고에 있는 참여인원과 석식비 지급 참여인원이 불일치함에도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②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증빙서류 없이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 ③ 일반수용비 성격의 현수막 제작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비소모품 구입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적정함에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 ④ 납부기한 내에 지출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체료를 부당하게 집행
- 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변동시 변경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다시 체결 해야하며 이에 따른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 금액에 대한 증·감을 반영하여 당초의 지출원인행위에서 이를 감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의 지출원인 행위 금액에 대해 지출원인행위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공사업체의 청구가 들어온 뒤 지출원인행위를 뒤늦게 확정하여 지출집행 절차를 위반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
- ⑥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집행
- ⑦ 2019년 12월에 예산 집행 잔액을 소진할 목적으로 연말 집행잔액을 몰아서 집행 위와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이며,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집행 요구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53호 서식‘구입(물품 · 기타)지출결의서’에는 ‘승낙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¹⁾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 · 청구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1) 별지 제53호서식: 구입(물품 · 기타) 지출결의서, 별지 제54호서식: (공사 ·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하고 검수(별지제96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하며, 제3항에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평동은

- ①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승낙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 없이 세출 예산을 집행
- ②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작하면서 승낙 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를 누락
- ③ 지출결의상 내용 정정 시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함에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정
- ④ 지출결의서 작성 시 관계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지출결의서 상 발의, 원인행위기재, 계약 등 다수의 날인을 누락
- ⑤ 감사시작일인 2018. 9. 1부터 현재까지 물품출납원인 총무업무담당자의 인장을 물품검사(수)조서에 날인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날인을 누락

위와 같이 부적정하게 지출결의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평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지방자치단체구매(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1. 업무 개요 및 관계 규정(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4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 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 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 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 다.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5.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에서는

- 가.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 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 (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 다.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 (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실혱동은

- ① 지방자치단체구매퀲드 발급 시에는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음.
- ②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나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구매퀲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함에도 감사시작일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았음.
- ③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건에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음.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구매퀲드(현금영수증)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 및 관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실혱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신풍동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110,000원
내 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공용차량을 이용한 때 1만원을 감액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총11건, 11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과지급 된 여비 11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415,000원
내 용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총415,000원을 미소화 하였으며 총175,000원을 과소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공채 415,000원을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신풍동
제 목 인지세(수입인지) 수입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60,000원
내 용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의거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마을 정비사업 외 2개소 총3건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지세 2만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총3건, 60,000원의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징수한 인지세(수입인지) 60,000원을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시정-소화)

[일련번호: 7]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평동은 콘크리트포장공사('18년 2건)함에 있어 다짐도 향상을 위한 필수 공정인 살수차(5,500L) 살수 공정을 감독함에 있어 출장 결과보고서(공정확인) 및 준공도서에 증빙자료(살수차 임대) 없이 준공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평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계약집행기준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장 제1절(분할계약의 금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공종의 사업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9]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사업예산 잔액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제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예산이용 : 지방의회 승인, 예산전용 : 자치단체장, 예산변경 : 실·국장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예산변경(부기변경) 등 행정절차(승인 등)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0]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신풍동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495,000원
내 용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법인균등분 주민세대장 정비 소홀로 인하여, 주식회사 ○○○ 등 6개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450,000원, 지방교육세 45,000원 합계 495,000원 과세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495,00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1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신풍동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2,172,720원
내 용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 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재산분 주민세대장 정비소홀로 인하여, 김제시 ◇◇◇ 등 6개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2,172,720원 과세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2,172,72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1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장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는 기간 기산점 및 만료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 제155조(본장의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산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나.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에 따라 구 증명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신증명청에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할 경우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송 요청을 받은 날 포함)에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기간을 산정할 시 이송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되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 등 35명의 전출자에 대해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처리하지 않고 최장 17일간을 지연 이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3]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수입증지 수수료 납입 지연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항에는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수납금의 납입)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까지 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수입증지 수수료 관련 업무 처리 시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일일(당일)결산 후 이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최장 5일간 현금으로 보관하여 수입증지 수수료의 납입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4]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부적정 지급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70,840원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의 실경작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김제시 **번지외 3필지(244㎡)가 일부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대지, 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총 4필지에 대해 70,8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불금 70,84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지법 제10조, 제49조제2항 및 제54조와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부재지주 소유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시 전수조사 등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농지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후 김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사기간 중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부재지주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수령내역과 대사한 결과 총19건 47,571.45㎡에 대하여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농지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보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필지들을 누락 제출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6]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소형농기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및 「김제시 소형농기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2015~2019)」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농기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지원금으로 5년 이내에 동일기종을 보조받은 법인 또는 농업인’과 ‘최근 5년 이내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2015년 소형농기기계 지원사업으로 △△△에게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고, 2018년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기’를 중복 지원하는 등 총 2명에 대해 「소형농기기계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7]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경로당 및 한울타리행복의 집 운영비 정산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김제시 경로당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경로당지원) 및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경로당(한울타리 행복의 집 포함)에 대한 정산검사에 있어 일부 정산서에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5만원 이상 현금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신풍동
제 목	가정위탁 보호아동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아동복지법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풍동은 일부 가정위탁세대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례관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